+

실물 흡사 칼·총…광주 무인문구점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일부 제품 '만 14세 이상 이용' 불구 누구나 구입 가능…KC 마크도 없어 관리 · 단속 권한 불분명 학부모 불안

광주 지역 무인 문구점에서 실물과 흡사한 모 형 무기류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북구 본촌동 한 무인 문구점에는 총 과 칼 등의 모형 장난감이 곳곳에 진열돼 있었다. 개중에는 'S&W (스미스&웨슨) 6906' 등 실물과 외관이 흡사한 것도 다수였다. 도검류 장난감의 경우 재질은 플라스틱이었으나, 날 끝은 종이 정 도는 어렵지 않게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웠다. 이 탓에 사용 중 위험이 우려되는 일부 제품에

는 '만 14세 이상 사용'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문제는 제품 모두 별다른 시건 장치가 없었고 무인 매장 특성상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같은 날 오후 남구 봉선동의 무인 문구점 역시 총·칼 모형 장난감이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전 시된 상태였다.



24일 광주 북구 본촌동 한 무인 문구점에 실물과 흡사한 총·칼 등의 무기류 장난감이 별도 안전장치 없이 진열돼 있다. 일부 제품에는 '만 14세 이상 사용' 문구가 표기돼 있으나, 누구나 구입 가능해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특히 장난감 대부분은 KC(국가통합인증) 마 크도 없어 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도 우 려됐다.

또 북구 신용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비

슷한 장난감이 전시돼 무인 문구점을 비롯한 무인 판매점 전체가 관리 사각지대임을 실감케 했다.

이처럼 광주 곳곳의 문구점 등 무인 점포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

매되고 있어 학부모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잇 따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김모(40대·여)씨는 "하교 후 '살 게 있다'는 아들의 말에 무인 문구

점을 처음으로 가봤는데 적잖이 충격이었다"며 "과자나 학용품이야 아이들이 스스로 구매하면 서 교육 효과도 있겠지만, 다칠 수도 있는 장난 감의 경우 예외로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또 다른 학부모 박모(50대)씨도 "장난감이라 곤 하지만, 얼마든지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 건들인데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소비되고 있다 는 것 자체로 놀랍다"며 "대놓고 눈에 띠는 유해 업소가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 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행법 상 무인 문구점은 자유업이라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다"며 "행정 당 국에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어렵고, 단속을 실시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속사정을 털어놨

이어 "무인 아이스크림점의 경우 식품을 판 매하는 곳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나가 긴 하나, 장난감이나 문구류를 판매하는 행위 에 대해선 소관이 아닌 만큼 나서기가 어렵다" 며 "현행 제도상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찬웅기자

신안 여객선 좌초 당시 '항로 이탈 알림' 꺼져 있었다

해경, 경위 파악…규정 위반 여부도 선장 상대론 "지휘 소홀" 진술 확보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 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선 '항로 이 탈 알림'이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 호좌초사고당시근무중이던목포 VTS소속관 제사 A씨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항로 이탈 알림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다.

다만, 이탈 알림을 끈 게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애초에 꺼져 있었으 며 소형 어선의 항로 이탈에도 알림이 울려 업 무에 방해가 됐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명백해질 경우 업무상과실치 상 혐의로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또 항로 이탈 알림이 어떤 경위로 꺼지게 된 것인지 파악하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들 여다볼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B(60 대)씨가 평소에도 지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해상은 좁은 협수로라 선장이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하나 당시 B씨는 선장실에 있 었는데, 이 같은 일이 여태 비일비재했다는 것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 지지 않았으며 목포해경은 앞서 구속된 일등 항 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재영·목포=정해선기자

경찰, '화순 투견판' 의심자 40여명 적발

9마리 구조…소유주 등 확인 계획

불법 투견판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으나 가담 의심자 40 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 시께 화순군 이양면 한 야산에서 투견 의심 현 장 적발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 터 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화순군청과 함께 단

속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이 의심 장소로 지목 된 비닐하우스 주변에 접근했을 당시 이미 일부 인원은 줄행랑을 친 상태였고, 현장에서도 개들 이 싸우는 상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 찰은 일대에서 배회하거나 숨어 있던 이들을 계 속찾아나섰고,총40여명의신원을확인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40여명 가운데 개들의 주인이 있는지와 해당 장소에서 실제 투견판이 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재영·화순=이병철기자

'선거법 위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행

광주·전남 21대 대선 수사 마무리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광주 한 식당에 기부 행위 를 한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 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월15일 지역 소외계층에게 '1천원 백반'을 판매 하는 한 음식점에 사비로 식재료를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제가 된 건 당시가 윤석열 전 대 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때고, 한 전 총리가 음식점 후원으로부터 보름여 만인 5월2 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점이다. 이 행위를 두고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지난 4 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라 판단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송치를 끝으로 광주경 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수사를 마쳤다.

광주경찰청은 39건(42명)을 수사해 20건(21 명)을 검찰에 넘겼고 18건(20명)에 대해서는 불 송치 결정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56건(99명)을 수사한 끝 에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재영기자

GGM 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 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 노조 는 24일 "광주시가 GGM 내 노조 탄압과 청년노 동자 차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징계·차별·폭력·욕설 등을 반복해 청년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며 "정당 한 쟁의행위에 대한 폭력, 노조 혐오, 공갈 협박, 보복성 인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상품비교

특히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3일 김진 태 지회장에 대한 올해 1월1일자 2차 보직해임 을 '부당인사'로 판정한 것과 앞서 1차 파트장 보직해임 역시 부당인사로 판정난 데 대해 사측 의 노조탄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

노조는 "노조 탄압을 주도한 사측 인사와 상생 안전실장에 대한 책임 조치, 청년노동자 인권 보 장, '광주형일자리' 대책 등을 광주시가 직접 나 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찬웅기자







+

등록번호: 2023-광주광산-0025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010-3929-1403